

국채·금 약세 속 글로벌 자금 현금행… AI·반도체 돈맥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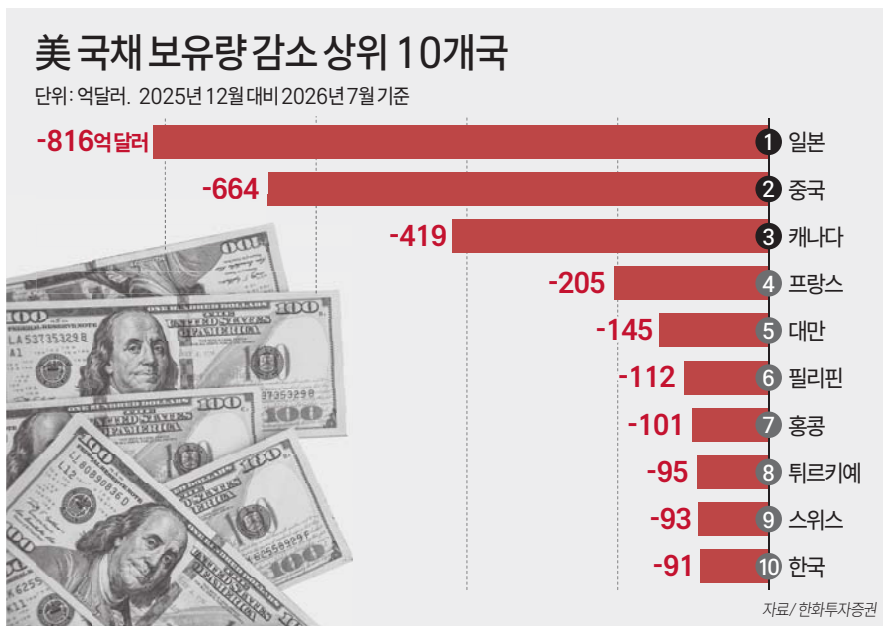
美 재정적자·추가 건축 우려 겹쳐
주요국 국채금리 동반 상승세
위험자산 줄이고 현금 비중 확대
기업 차환·투자비용 부담 가중
AI·반도체 자금조달 경쟁 심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 현금 보유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자산 매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진 데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미 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까지 겹치며 자칫 이런 변화가 대출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금융 관련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정된 투자자금이 특정 산업과 기업으로 향하는 쏠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요국 국채 금리 '동시 발작'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미 장기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 속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S&P 500지수는 0.17%, 나스닥 종합지수는 0.09% 내렸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48% 내린 배럴당 89.38달러에, 브렌트유 선물은 2.56% 내린 102.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각각 8월 31일 이후, 9월 22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유럽연합의 예산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스톡스600지수는 0.09% 떨어졌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45%,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53% 하락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안전한



파란치로 인기를 끌던 국채 가격도 떨어졌다. 이날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5.265%에 거래되며 이날 들어 8번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국채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진 데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꼽힌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8~6.3%에 머물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만 해도 3.1~4.6% 수준이었는데 가파르게 늘어났다. 문제는 재정적자와 함께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다. 지난해부터 2036년까지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

340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1조 1700억달러(87.3%)가 순이자지출 증가분이다. 재정적자를 메우고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다는 게 채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들의 회사채 발행도 문제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도 치솟았다. 30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3.068%를 기록했고 지난 29일 연 3.1%까지 터졌다. 엔화 약세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금리,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뛰고 있다.

금 현물 가격은 30일 온스당 4180달러 대까지 하락했다. 세계금협회는 환율 정

책에 대한 우려와 미국 국채시장에 대한 불안, 금값 상승에 따른 투자 수요 등을 유입 배경으로 꼽았다. 국제 은 현물 가격도 61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주요국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01.403으로 전장보다 0.182% 상승했다. 장중에는 7월 28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경제 강세 속 통화정책은 긴축적일 것이라는 경계감이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유로화는 장중 달러당 1.1312달러까지 밀리며 2025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당 157.30엔으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AI·반도체 기업들 부담 커질 수도 … 특정 산업에 자금 편중 우려도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각국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싼값에 돈을 빌렸던 기업들이 엄청난 불황으로 인한 수익 급감에 대출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돈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빌릴 수 있었던 시절에는 기업이 빚을 늘려도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훨씬 높은 금리로 다시 빌려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쌓아 올린 막대한 빚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각 기업에 뒤늦은 '이자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는 AI와 반도체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반도체 확보, 전력망 확충 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달금리까지 오르면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은 “금리가 5.5~6%로 상승 시 성장세가 그에 상응해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입에 의존한 AI 투자의 경제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충격도 우려된다. 금리가 뛰면 이자 비용이 늘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빚투’(빚내서 투자) 심리도 얼어붙어 기업 자금 조달 시장까지 영향을 준다. 시장 한 관계자는 “항공, 호텔, 식음료, 자동차 등 소비자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전례 없는 신용 충격(credit shock)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자금 편중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AI 투자에 필요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국채 발행이 맞물리면서 자본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채권시장에서 한정된 투자자금을 두고 빅테크의 회사채가 국채와 경쟁하며 세계 채권 시장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창구는 연준이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급등하고 있다. 미국 담보부 이익률 금리(SOFR)는 연 3.90%(28일 현지시간 기준)로, 연준의 정책금리(연 3.75~4.00%) 하단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일시적 2주택 처분 2년으로 단축… “시장 영향은 제한적”

기존 보유자 소급 적용 제외
갈아타기 ‘선매도 후매수’ 늘듯
단기 매도 압력은 다소 커질 전망
임대사업자 매물 호회 가능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들지만 주택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갈아타기 수요의 ‘선매도 후매수’를 촉진해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높아질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을 줄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이른바 ‘블로소득’을 억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다만 기존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고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장 영향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처분기한을 1년 줄이는 것만으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기는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존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아차피 집 한 채를 팔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현진 기자

다른 한 채를 사는 갈아타기 수요이기 때문에 결국 ‘팔고 살 것’이나, 사고 팔 것’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한국부동산융합연구원 원장)도 매물 증가나 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권 교수는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과 관계없이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사람들은 이미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팔지 않은 사람은 계속 보유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처분기한을 1년 줄인다고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판도를 바꾸거나 집값을 안정시킬 정도의 조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처분기한이 짧아진 만큼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움직임은 종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며 “현재 무주택자의 매입세가 그만큼 강하게 뒷받침되는 여건은 아니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조정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갈아타기 수요자의 매매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분기한이 1년 짧아진 만큼 새 집부터 산 뒤 기존 집을 처분하기보다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는 ‘선매도 후매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앞으로는 선매도 후매수를 지키라는 신호로 보면 된다”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나홀로 아파트에서 대단지로 옮기는 경우처럼 기존 주택이 제때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팔고 사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도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 만큼 종전보다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 보유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세차익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해석했다. 집을 한 채 더 산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두 채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면, 두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진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얻는 시세차익을 ‘블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매물 풀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시한을 둔 조치는 실제 매물을 끌어내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위원은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만큼 특히 비강남권에서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최근 시장의 매물 가뭄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매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임대시장에서는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도를 유도하면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임대공급을 규제하면 결국 그 부담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lhj@



metro

배경훈, 독파모 중단설 일축
프론티어 AI와 양축 추진
산업·사회 현장 맞춤형 AI 확산 강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중단설’을 공식 부인했다.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는 대한민국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고, 독파모는 AI가 산업과 사회 곳곳에서 쓰이게 하는 두 개의 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최근 독파모 2차 평가 기준에 대해 잡음이 일자 정부가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최상위급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배 부총리는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엑스에 대한민국 독파모는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 취지를 바로잡기 위한 설명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AI가 모두 초거대 프론티어 모델일 필요는 없다”며 “제조·금융·의료·공공서비스와 퍼지컬 AI 등 각각의 현장에서는 비용과 속도, 보안, 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의 AI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피력했다. 앞서 그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 프론티어 모델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AI는 이제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기술을 넘어 수학과 과학의 난제를 풀고, 사이버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전략기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성 기자 msjo@



metro